

# ‘대선 전초전’... 與野,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격돌 전망

## 2021 국정감사 스타트

文정부 마지막 국감 오늘부터 실시  
대장동 의혹, 증인 채택 두고 첨예  
국회 법사위·행안위 등서 다툰다

2021년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  
한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  
감사로 10월 1일부터 21일간 상임위원  
회별로 일정을 소화한다.

지난달 30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입장  
을 종합해보면 2021년 국정감사의 최  
대 이슈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유력 후보  
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는 양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의 격돌은 불가피  
하다.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집어삼킨 대장동 의혹은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  
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서 다툰다. 당장 관련 상임위에서 증  
인, 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뉴스

게 맞서고 있다.

정무위에서는 전날 국민의힘이 대장  
동 의혹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40  
명 정도의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수사 중인 사  
안에 대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화천대유를 비롯  
해 관련자들의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어 이를 두고  
법사위와 행안위의 국정감사도 여야의  
격돌은 피할 수 없는 형국이다.

국감을 준비 중인 민주당의 한 관계  
자는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언론에  
서 보도가 됐듯이 화천대유 관계자들은

국민의힘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윤석열 국민  
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부친 집을 감만  
배 화천대유 대주주의 친누나가 매입한  
보도도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라  
고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에 과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으로 역풍을 맞은 국민의힘은 대  
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이자 설계자는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  
사라며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비롯해  
국정감사에서 이 경기지사를 통해 반전  
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따라 행안위와 국토위 국

정감사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민주당  
의 대선 경선 일정은 10월 10일에 종료  
된다. 현재 과반 이상의 득표를 기록하  
며 1위를 수성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  
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면 경기지사의 사퇴 여부가 변수가 되  
기 때문이다. 이 경기지사가 현직을 유  
지할 경우, 10월 18일 행안위 국정감사  
와 20일 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캠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현직에서 사퇴한다”  
며 “이 후보의 그간 행보를 보면 경  
기도정의 책임감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에 직접 뛰어들어 적극적  
으로 나설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 경  
선과 이번 주말 2차 슈퍼위크에 전력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며 “캠프 내에서도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  
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도 국정  
감사의 쟁점으로 다시 부각될 전망이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검 압수  
수색을 비롯해 검찰에서도 동시에 수사  
가 진행되는 사안으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여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법사위와 제보자 조  
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만남과  
관련해 정보위, 조성은 씨의 국민권익  
위원회 공익제보자 신청과 관련해 정무  
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의힘은  
조성은 씨와 박 국정원장의 만남을 빌  
미로 고발사주 정치적 의혹을 집중 제  
기할 모양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  
에서 “법사위 증인 채택에 있어 일반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기관 증인으로  
국정감사를 운영했다”며 “다만 윤석  
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 일반 증인으로  
볼 것인지, 여야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  
라고 밝혔다.

참고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 대부  
분은 현재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선거  
캠프에 소속돼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순준성 검사가 핵  
심이다. 8일 대구 고검·지검 국감이 있  
고, 18일 대검 국감이 있어 여당은 기관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려고 하지만 국민  
의힘에서 반대가 너무 심하다”며 “증인  
에 대한 추후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현  
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경제·산업 뜨거워 감자는 ‘네·카 플랫폼’

(네이버·카카오)

한성숙·김범수 등 줄줄이 증인 채택  
네이버, IT기업 직장문화 관련 질의  
‘골목상권 논란’ 카카오, 타깃 전망  
기존 산업-플랫폼 갈등도 도마위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21대  
국회 경제·산업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황 속  
에서도 성장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  
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  
련 상임위원회는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달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플  
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  
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카카오, 배  
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우려  
와 시각을 공유하고 ‘골목상권’을 지키  
는 노력에 있어 여야가 협치하는 모델  
을 만들자”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 제  
안한 바 있다.

‘플랫폼 공룡’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  
는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의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국  
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금융 플랫폼  
‘카카오뱅크’를 통해 구축한 빅데이터  
와 사용자를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택  
시, 퀵서비스, 꽃배달, 미용실 등 중소  
상공 분야로 확대해왔다. 이에 플랫폼  
기업의 독점·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  
었다.

카카오는 지난달 14일 ▲골목상권 논  
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  
편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

간 3000억원 조성 등의 상생안을 내놔지  
만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의 역할에 관련  
한 질의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산  
자위)에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택  
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의 스마트호  
출 서비스 가격 인상 논란을 일으킨 카  
카오모빌리티 류경선 대표는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에 증인  
으로 출석한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  
표는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농림  
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환경노동위원  
회(환노위) 국감에 출석해 ‘IT 기업 직  
장 문화’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  
다. 지난 5월 네이버에서 직장상사의 갑  
질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관련

상임위 국감에서 화두가 될 것으로 보  
인다. 이와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  
벌투자책임자(GIO) 증인 출석 여부는  
여야 간 입장차로 추가 논의한 뒤 결정  
하기로 했다.

기존 산업과 플랫폼 기업의 갈등도  
국감 현장에서 재현될 전망이다. 오는  
6일부터 열릴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참고인으로 대한약사회 김대원 회장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출석한다. 닥  
터나우는 ‘약배달 서비스’를 하는 신생  
플랫폼 기업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처방과 약 배  
달 서비스의 혜택을 봤다. 약사회는 “I  
T 자본이 국민건강을 영리에 이용하려  
한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밖에 강한승·박대승 쿠팡 대표, 배  
보찬 아놀자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  
현 당근마켓 대표, 엄성한 쿠팡플립먼  
트 부사장 등이 주요 상임위 국감에 증  
인 및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한편 민주당은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을  
지난 8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플  
랫폼 규제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국감  
에서 플랫폼 기업을 집중 공략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  
한 산자위 이성만 의원실 관계자는 지  
난달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카카오가  
상생안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골목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수준에는 못 미  
치는 맹점이 있다”며 “(의원계서) 수수  
료, 골목상권 상생 방향 쪽으로 질의를  
많이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플랫폼 기업의 자영업  
자, 중소 상공업 분야 진출에 따른 이익  
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대  
기업 온라인 플랫폼이 골목시장에 속해  
있는 상황에 대해 질의 방향을 잡고 있  
다. 각 사에 자료와 해명 자료를 받아 취  
합을 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文 대통령, 김정은 메시지에 정중동 행보

김정은, 이중적 태도 등 철회 요구  
연이은 메시지에 신중한 입장 보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  
원장의 ‘이중적 태도·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 정중동(조용한 가운데 움직  
임을 보임) 행보를 하는 모습이다. 올해  
유엔총회 고위급회의의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의 ‘중전선언’ 제안을 김정은 위  
원장이 수용하는 전제조건으로 밝힌 것  
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 간 통신연락선 재  
복원 ▲이중적 태도·적대시 정책 철회  
를 전제로 한 문 대통령 ‘중전선언’ 제  
안 수용 등 남북 현안 입장에 대해 밝힌  
것과 관련 신중한 입장이다.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시험 가운데 남  
북관계 개선 의지 표명 의지를 밝힌 만  
큼 청와대가 북측 메시지의 숨겨진 의  
미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



문재인 대통령

/뉴스

다. 문 대통령이 입기 말까지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청  
와대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 시정연설

내용과 관련해 “(최근 김여정 부부장이  
낸 담화와 북 극조음미사일 발사 발표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  
밀하게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연이은  
북측의 대남 메시지를 청와대가 신중하  
게 바라보는 셈이다.

이와 관련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  
난달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에 출연한 가운데 “통신선 복원에  
(북한이 응답하는 것을) 통해 북한의 의  
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 호출  
에 북한이 응답하는 채널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급 단위의 대화들을 통해  
서로 합의되고 협의돼 열리는, (이렇

게) 1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남북관계 개  
선에서 최상의 시나리오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연이은 북한의 대남 메  
시지에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은 ‘남  
북 관계 복원’이라는 징검다리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만들  
기 위한 정중동 행보 차원으로 풀이된  
다. 앞서 북한이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  
계기로 통신 연락선을 단절하고, 지난  
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까지 하는 등 남북관계가 위태한 순간  
들은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  
시지인 셈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